

이 대통령 “필요시 긴급재정명령”… 에너지 위기 대응 총력

헌법 제76조 규정된 대통령 권한 관행 없애지 않는 선제적 대응 제도·절차까지 과감히 변경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와 관련해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상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는 내우·위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등과 관련해 긴급조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중동전쟁 대응현황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치가 필요한데 국회 입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질서·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행사된다.

다만 긴급명령 발동시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때문인지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매우 드물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1993년

에 발동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이 대통령은 “각 국무위원이나 부처, 청에서 위기 대응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제도나 법령, 관행 등 걸리는 일이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사실 통상적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며 “법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뀌어야 한다. 지금 ‘수입 규제 때문에 어렵다’, ‘심사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심사 절차를 앞당기거나 필요하면 절차를 생략하는 것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 해 버리는데, 일선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국무위원들이 풀어줘야 한다”며 “내가 책임지겠으니 적극적으로 찾아내라고 하며 장애물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필요를 최대한 수집한 뒤, (현장 요구가) 합당한데 현 제도나 법령에 제한이 있으면 그것을 극

복할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 방침도 바꾸고 관행에서 벗어나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해 주면 좋겠다. 모든 법 제도에는 예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라며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앞뒤의 맥락을 보자면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율적인 대안들을 내놓아라, 그런 도출된 대안들을 통해서 특단의 대책을 비상한 대응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으니 그중 하나의 예시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들었다고 할 수 있겠다”고 부연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6정당, 개헌 추진 공식화… 5월 의결 목표

국힘 제외 민주·조국·개혁신당 등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 담겨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6당이 31일 개헌안 공동 발의 작업에 착수했다.

우 의장과 한병도 민주당·서왕진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천하람 개혁신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본청 국회의원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압도적 다수의 뜻과 국회 제정당 의지를 모아 오늘부터

헌법 개정안 발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날부터 국회의원 공동발의 작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불씨를 살리지 못하면 언제 또 이 정도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이 두 차례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원내대표 연석회의로 이어졌다”며 “참석자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 개정안 국회 발의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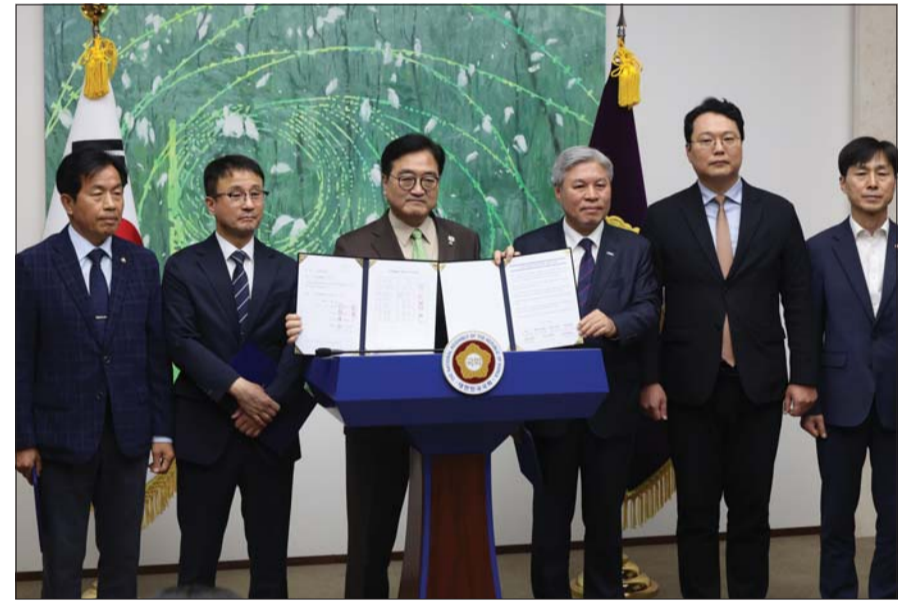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개헌안 공동발의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이날 회견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국민의힘만 개헌안 공동발의에 참여

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 의장은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개정안 발의와 5월 초순 예정된 국회 의결까지 아직 시간이 많다”며 “이 시간까지라도 국민의힘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개헌에 참여하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민주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균형 발전 의제 등이 담겼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에서 공동선언문을 공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국회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뉴시스

‘이정현 공관위’ 일괄 사퇴… 국힘 재정비

경기지사 제외 광역단체장 공천 완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새 공관위 담당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31일 공관위의 일괄 사퇴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를 새로 꾸려 남은 공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기지사 후보를 제외하고 중앙공관위 차원의 광역단체장 공천을 대부분 끝냈다”며 “제가 오늘 공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이 일괄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 지도부와 논의를 통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새 공관위를 구성해서 사람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요청했다”며 “대표도 그 부분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50만 이상 도시 경선결과를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후 공관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뉴시스

가 이틀 만에 반복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공천은 모든 것을 담아내진 못했지만, 앞으로 국민의힘이 변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며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라는 화두를 던졌다. 낙하산·계파·

파벌·나눠 먹기 공천을 배제하려고 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재보궐 선거와 경기지사 및 남아 있는 미공천 지역에 대한 모든 업무는 새 공관위가 승계할 것”이라며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새 공관위가 출범해도 기존 컷오프 반복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관위의 결정은 내부의 합법적인 규정과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29일 페이스북 북에서 “당이 필요로 하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제 역할을 다할 준비를 할 것”이라며 6·3 지방선거 광주·전남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제 문제는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위원장 임무를 마치고 또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與, ‘지선 공식’ 신임 상임위원장 발표

안호영, 기후에너지노동위원장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6·3 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공식 상임위 3곳의 신임 상임위원장 명단을 발표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은 4선 서영교 의원이 내정됐다. 법사위는 그간 추미에 위원장 체제로 운영됐으나, 그의 경기지사 출마로 공식이 됐다.

신임 행정안전위원장은 3선 권철승 의원이 내정됐다. 그간 행안위를 이끌어 온 신정훈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은 3선 소병훈 의원이 내정됐다. 서울시장 후보로 뛰고 있는 기존 박주민 위원장은 전날 “박주민의 정치는 서울에서 계속된다”며 사임의 뜻을 밝혔다.

기후에너지노동위원장은 안호영 의원도 전북지사 출마를 위해 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걸 고심했으나, 전북



추미에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지사에 불출마하고 위원장직을 계속 맡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하반기 상임위원장은 오는 5월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가 인선하기에 이번에 선임된 위원장은 두 달만 임기를 한다”며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고 추경·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해서 기존의 관례를 따르지 않고 현재 활동하는 상임위 안에서 인선했다”고 설명했다.

/박경수 인턴기자